광주 공영주차장 캠핑카 '얌체 장박' 여전…단속 골머리

장기 주차 금지법 시행 3개월…방치된 캠핑트레일러 등 단속 '0건'
메뚜기 주차 땐 단속 근거 애매…강력 단속 가능한 제도 보완 필요

최근 광주시 북구 월출동 시민의숲 1주차장에 캠핑 트레일러와 보트 등이 장기 방치 주차돼 있다.

공영주차장에 일명 '알박기'한 차량을 제재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개정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3달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지자체에서 단속·견인된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등 장기주차차량은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주차장법이 개정된 지난 7월 10일 이후 3개월 간 자치구에서 장기 방치 주차 캠핑카·트레일러에 대해 단속·견인 조치한 건수는 '0'건이다.

개정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노상주차장, 국가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 제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차량을 이동, 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도 광주시 곳곳의 공영주차장에는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캠핑카·트레일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날 광주일보가 찾아간 광주시 북구 월출동 시민의숲 1주차장에는 80개 주차면 중 20%에 달하는 15면에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 보트 등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캠핑트레일러는 방치한 지 오래됐는지 거미줄이 쳐져 있고 덮어놓은 천에 낙엽이 쌓여 퍼렇게 썩어 있었다. 캠핑카는 운전석 손잡이까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광주시의 다른 주차장에서도 캠핑카·트레일러가 잇따라 발견됐다. 북구 대촌동의 100여면 드론공원 주차장에서도 3대의 캠핑카가 방치돼 있었는데, 자치구에서 인근에 걸어 둔 '장기 주차 금지' 현수막이 무색했다.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에도 장기 방치된 캠핑트레일러 2대가 주차돼 있었는데, 트레일러 주변에 무성하게 자라난 풀에 파묻힐 지경이었다. 트레일러에는 '이동 주차 바랍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스티커가 햇빛에 하얗게 바래고 풀이 떨어져 나가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였다.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에는 캠핑 트레일러 2대가 방치돼 있었으며, 한 트레일러는 타이어가 찌그러지다시피 바닥에 붙고 지지대가 쓰러져 있었다.

방치 차량은 주택가 인근 소규모 공원에도 침투했다. 광산구 장덕동 원당산공원 부설주차장에는 40면 중 5대의 캠핑카·트레일러가 주차돼 있었는데, 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트레일러 앞 부품이 주차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등 보행자와 타 운전자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 지자체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견인 조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하고 있다.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1개월 방치' 기준을 증명하기 어려운데다 같은 공영주차장 내라도 주차면 한 칸이라도 옆으로 이동하면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 자치구는 장기 주차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차량에 '이동 주차 요구' 계고장을 붙이고, 차적을 조회해 차주에게 이동 주차 요구를 한 뒤 한 달 동안 지켜보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주가 '메뚜기'처럼 주차장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주차하면 별다른 추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무리 방치 차량이 많이 적발돼도 견인 조치까지 하기에는 시간·절차적으로도 거칠 것이 많고 운전자가 피할 방법도 많다. 이는 다른 불법주정차량 문제와도 비슷하다"며 "장기 방치 차량을 근절하려면 더 단호하게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수년간 캠핑카·트레일러 방치 주차 문제가 제기되고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져 왔음에도 지금까지 캠핑카·트레일러 등록 대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캠핑 차량 관련 자료는 지난 2019년 4월 기준 568대(캠핑카 90대, 캠핑 트레일러 478대) 등록된 사실만 확인한 게 전부다. 비공식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캠핑카 등록 대수가 1082대까지 늘어난 것은 확인했지만, 캠핑 트레일러 수는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법적으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 내에 포함돼 있고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며 "타 기관과 협력해 분석하면 등록 대수를 알아볼 수는 있겠으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타인 출입증으로 한빛원전 8개월 출입…보안 구멍"

조인철 의원, 관리 허술 지적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영광 한빛원전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인 출입증으로 수개월 동안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한빛원전을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광주 서구 갑)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운송회사 직원 A씨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타인 출입증으로 한빛원전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출입증은 같은 운송회사의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 B씨가 업무를 위해 발급 받았다가 퇴사하면서 운송회사에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송회사가 B씨 명의 출입증을 한빛원전에 반납하지 않았고 출입인증을 받지 않은 A씨가 이용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출입증 원 소유주인 B씨가 원전을 출입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 새로운 출입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빛원전은 8개월 동안 출입자와 소지자의 일치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정 출입 사건을 상급 관리·감독 기관인 원안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발전소는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국제공항 등과 같이 엄격한 출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시 출입자'는 반드시 직원이 동행하고 '수시 및 상시' 출입자는 경찰을 통한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수원 규정에 따르면 출입증을 지연 반납하면 1개월 출입 정지, 반납하지 않으면 6개월 출입정지에 처한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한빛원전에서 적발된 원전 부정 출입은 309건에 달해,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5개 원전본부 중 가장 많았다. 새울(266건), 월성(206건), 고리(170건), 한울(139건) 순이다.

이밖에도 조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8월)간 원전 내 불법드론 탐지 건수'에 따르면 한빛원전에서 25건의 불법 드론이 탐지됐다. 2022년 1건, 2023년 13건, 2024년 8월까지 11건의 불법드론이 탐지됐다. 이중 올해 탐지된 2건은 조종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국가 최고 보안 등급으로 운영돼야 할 원자력발전소에서 부정 출입이 발생하는 것도 부족해 상급 기관에 출소·누락 보고하는 것은 한수원의 보안 수준을 보여준다"며 원안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장혜원 기자 hey1@

10·16 영광군수 재선거
무소속 후보 현수막 훼손 수사

10·16 영광 재선거를 앞두고 영광읍내에 설치된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광경찰은 무소속 오기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사전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 낮 영광읍 영광군청 앞 사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에 인쇄된 오 후보의 얼굴 부분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 얼굴 부분이 십자 모양으로 길게 찢어졌다는 점에서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고의로 훼손했다는 것이다. 찢어진 현수막은 새것으로 교체됐지만, 경찰은 고발인 진술과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청년·장애인 울린 사기범 잇따라 구속

대출금 수천만원 가로채고 사업자금 대 달라며 수억 뜯어

청년대출 알선 등을 미끼로 청년과 장애인 등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14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갈취한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와 부산시 등지에 있는 장애인 2명을 포함한 청년 10명에게 접근해 총 9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청년 대출' 광고를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제2금융권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했다.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를 요구하는 식으로 대출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장애인 2명에게는 "절차상 내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해 줘야 한다"고 속여 대출금 전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전과로 지난 2021년 출소한 뒤 누범기간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업 자금을 대 달라"며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은 40대 B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B씨는 2022년 1~12월 수차례 지인과 옛 거래처 관계자 등 4명에게 자신이 "농산물 유통 실적 전국 1등이다.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4억 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B씨는 피해 금액을 코인 투자,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는 과거 농산물 유통 사업을 했으나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6일 힘들다는 취지로 광주시 서구의 한 지구대를 방문했다가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나 현장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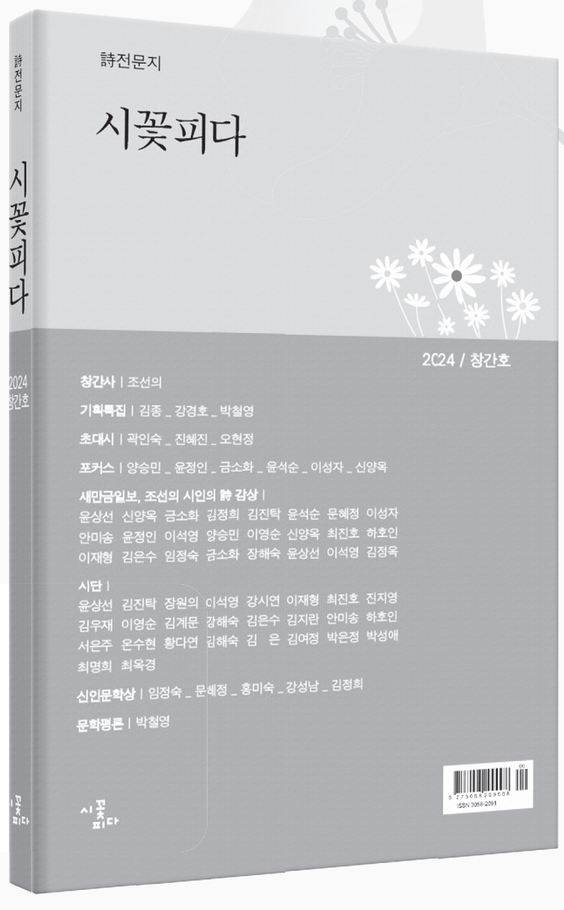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